www.krila.re.kr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12-6 (서초동)
T 02·3488·7300 / F 02·3488·7309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RILA Newsletter

June 2012 **Vol. 3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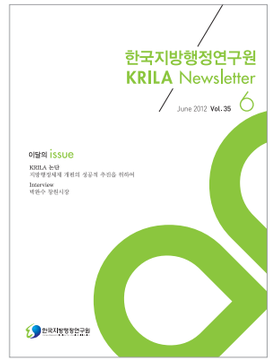
이달의 issue

KRILA 논단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성공적 추진

Interview
박완수 창원시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CONTENTS



6 June 2012 **Vol. 35**

한국지방행정연구원 Newsletter 통권 제35호
발행인 / 한 표 환
편집인 / 뉴스레터 위원회
연락처 / T 02·3488·7300 / F 02·3488·7309
디자인 / (주)소프트하우스

본 뉴스레터는 매월 말 발간됩니다.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성함, 연락처, 주소, 이메일 주소**를 기입하여 아래 메일주소로 신청하여 주십시오.(무료) **newsletter@krila.re.kr**

이달의 issue 지방행정체제 개편

4 ● **권두언**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8 ● **KRILA 논단**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성공적 추진

14 ● **Interview**
박완수 창원시장

18 ● **자치단체 탐험**
푸른 바다의 고장, 창원

20 ● **해외 우수사례**
기초 자치단체 통합의 이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일본의 경험

22 ● **도시통계**
도농통합 자치단체

26 ● **연구원 동정**

27 ● **알림마당**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홈페이지에서 Newsletter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www.krila.re.kr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강 현 욱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위원장)

현재의 우리나라 지방행정체제는 교통 · 정보통신 발달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주민불편이 심화되고 효율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현대 사회는 세계화와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 생활경제권의 변화, 대도시 인구집중과 농촌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으나, 지방행정체제는 이러한 변화에 뒤따르지 못하고 오히려 국가와 지역발전을 저해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학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지방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지역의 개발 등으로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권이 분리되어 불편이 심화되고, 농촌지역의 자생력 부족과 도시지역의 가용면적 부족으로 인한 지역발전역량 확보의 한계, 그리고 다계층제에 따른 업무 중복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반면에 일각에서는 시 · 군 · 구 통합이 근린자치를 훼손한다는 등 개편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주민의 복리증진, 국가와 지방의 경쟁력 증진을 위해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지방과 국가가 함께 윈윈"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웃나라 일본도 주민생활권 중심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만여 개에 달하던 시정촌을 1,700여개로 줄여서, 주민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지역재정의 어려움도 극복해 나가고 있다. 또한 행정구역통합으로 규모가 커지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지정시, 30만 이상은 중핵시, 20만 이상은 특례시로 지정하여 차별화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최근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여러 나라도 복잡한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여 지역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금 진행 중인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는 2005년 제17대 국회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 가 구성되어 공청회를 실시하고 다양한 개편대안을 가지고 논의하였으며, 그 후 2010년 10월, 제18대 국회에서 최초 여야합의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결실에 따른 것이다. 특별법의 제정 · 시행은 그동안 논의 수준에 머물러 있던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본격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개편대안에 대하여 심도있고 광범위한 논의를 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특별법에서는 추진주체로 지방행정개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①시 · 군 · 구의 개편, ②특 · 광역시의 자치구 개편, ③통합 자치단체 및 대도시에 대한 특례, ④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⑤읍 · 면 · 동 주민자치 강화, ⑥지방분권의 강화 등 6개의 과제를 부여하여 2014년 6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출범하여 1년여 동안 개편방안 마련을 위해 많은 연구와 논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 위원들은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대통령 추천 6명, 국회 여야추천 10명, 지방4대 협의체 추천 8명 등 24명과 정부위원 3명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해 6월 개편과제에 대한 향후 추진일정(로드맵)을 확정하고, 시 · 군 · 구 개편을 담당하는 구역분과위원회, 자치구 개편과 특례 등을 담당하는 기능분과위원회, 읍면동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근린자치분과위원회 등 3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 집중적으로 다뤄나가고 있다. 아울러 분과위원회에서는 주어진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전문가 자문과 토론, 권역별 순회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개편안에 반영해 나가고 있다. 우리 위원회는 우선 금년 6월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종합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 반영할 주요내용은 시·군·구 통합방안, 특·광역시 구와 군 지위·기능 개편방안, 대도시 및 통합자치단체 특례발굴 등 지방행정체제의 주요사항이 포함된다.

또한 2차적으로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방안과 읍면동 주민자치 강화방안 등에 대해서는 2013년 6월까지 마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읍면동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설치는 현재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모델을 마련 중에 있다. 위원회에서 개편방안을 제출하게 되면 이를 바탕으로 시·군·구 통합은 주민의사를 듣는 절차를 거쳐 대상지역을 확정하고, 자치구 개편 등의 과제는 국회 논의와 입법절차를 거쳐, 정부는 2014년 6월초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 이전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이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은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시·군·구를 통합하거나 자치체제를 바꾸는 것은 주민생활에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따라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하며, 국민들의 지지 없이는 성공할 수가 없다고 본다.

지금까지 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논의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 자치단체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기본계획이 마련된 이후에도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과제들에 대해 지역단위에서 활발한 논의를 기대하고 있으며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이다.

위원회에서는 새로운 100년을 내다보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은 매우 어려운 국가의 과제이다. 따라서 지방행정체제개편의 직접 영향을 받는 이해 당사자들은 개인을 떠나 국가와 지방의 경쟁력 강화, 주민의 복리증진 등 국가 전체의 미래를 보고 함께 참여해 주었으면 한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새롭게 마련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갈 때 성공할 수 있다. 성공적인 개편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앞으로 국민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성공적 추진

김 병 국
(지방행정체제연구센터장)

1.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추진기반

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의 제정

18대 국회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입법안을 제출하였고 이를 논의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고, 동 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개편내용을 확정한 후 2010년 10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이 제정 · 시행되었다.

동 특별법은 지방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부응하여 지방자치단체 역량을 대폭 확충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불균형을 최소화하기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는 현실 하에서 추진되었는데, 고비용 · 저효율 · 다층구조의 현행 지방행정체제의 문제점 전면 개선, 주민편익 증진 및 행정의 효율화,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정착, 세계화 추세에 걸맞는 지역단위 경쟁력 확보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동 특별법이 지향하는 바는,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계층의 적정화, 주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자치구역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자치역량에 부합하는 역할과 기능의 부여, 주거단위의 근린자치 활성화로 요약되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입법내용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예산집행의 주민 만족도 제고와 양성평등의 구현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나.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추진활동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특별법에 근거하여 대통령 직속의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체제개편위원회라 함)를 설치 · 운영하여 활동하였다. 동 체제개편위원회는 국회, 정부, 지방4단체에서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하되 3개 분과(구역분과, 기능분과, 근린자치분과)로 분류하여 심의의결, 자문, 용역연구, 해외조사 등의 활동을 해 왔다. 동 체제개편위원회가 2011년에 추진한

〈표 1〉

구분	내용
추진기구	·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설치 : 대통령6명, 국회의장10명, 4대협의체8명 · 심의의결 기능부여 및 2014. 12. 31까지 존속 · 구성 1년 이내(2012.6.30) 종합기본계획 제출 : 대통령, 국회
개편시기	· 2014년 7월 1일 출범하는 자치단체의 선거일 이전까지 완료토록 노력
특/광역시	· 광역자치단체로 존치
자치구	· 인구/면적 과소군 통합 · 군,구의 지위 및 기능개편방안을 종합기본계획에 포함하여 대통령과 국회보고
도	· 자치단체로 존치, 단 시군 통합에 따른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방안을 2014년 지방선거일 1년 전까지 대통령/국회에 보고 ⇒ 별도법률로 정함
시/군	· 시군통합기준 : 인구, 지리적 여건, 생활경제권, 발전가능성, 지역특수성, 역사문화적 동질성 등 · 국가의 시군통합지원, 시도와 시군구 관할구역 경계 제한 없이 통합가능 · 개편위원회의 역할 : 통합기준 작성공표, 통합방안의 대통령 국회보고 · 행정안전부 장관의 역할 : 통합자치단체장에게 통합 권고 · 통합관계 단체장 : 공동으로 통합추진 위원회 설치, 명칭, 청사소재지 심의
읍면동	· 읍면동 행정기능 철폐 · 주민자치회 설치 : 법인 설치조항(삭제) ⇒시기 구성요건 재정 등은 별도의 법률로 규정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행안부 장관)
특별지방행정기관	· 동법 시행일 1년 이내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이양계획을 개편위원회에 제출
교육자치/자치경찰	· 교육자치의 지방자치 통합노력 · 자치경찰제 실시 · 교육자치와 자치경찰 관련 별도 법률 규정

중점내용들을 살펴보면, 시군구 통합기군 마련 및 통합절차 제도 보완, 자치구 및 군 개편을 위한 연구 및 대안 확정, 1단계 행정계층별 기능분석 연구 완료 및 2단계 도 지위와 기능 재정립 방안 연구 중, 근린자치 우수사례 및 현장방문을 통한 주민자치회 모델 개발, 시군구 통합특례 제도 개선, 21개 중앙행정기관의 특행사무 이양계획 접수 및 지방의견 수렴과 이양방안 마련, 교육자치 · 자치경찰 제도 핵심쟁점에 대한 기초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체제개편위원회에서 최근 몇 가지 중요한 결정을 하였다. 우선 체제개편위원회의 3개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일부 교체가 있었고, 정책자문위원회 위원들도 일부 재구성하여 2012년 6월 국회 및 대통령 보고사항인 기본계획 작성을 마무리하고 있다. 둘째로 최근 자치구제도 개선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의 반대가 있었으나, 특별시 자치구의

준자치구화 및 광역시 자치구의 행정구화를 다수결에 의해 확정한 바 있다. 셋째로 시군통합의 경우 '12년 2월까지 19개 권역(48개 시군구) 접수된 지역을 대상으로 위원들 중심으로 4개 팀(수도권, 강원·충북권, 충남·호남권, 영남권)을 구성하여 예비심의(건의주체 의견수렴, 여론조사 준비 등)를 하고 있고, 4월 중순 이후 현장방문 및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 통합대상지역을 확정할 예정이다.

참고로 시군통합에 있어서 체제개편위원회의 움직임과 별도로 청주청원지역 통합은 추진되고 있어 2012년 5월 현재 주민투표를 준비 중에 있으며, 이번 통합대상지역으로 신청한 곳 중에서 전주완산지역 통합은 상호간 합의가 이루어져 통합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며, 보도 자료에 의하면 향후 국가적 차원에서 반드시 시군통합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의 경우 위원회에서 별도로 통합대상지역으로 확정하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2012년 6월 보고를 앞두고, 최근 과제별 활동 결과를 종합해 보면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구분	내용
특/광역시	· 광역자치단체로 존치
자치구	· 특별시 자치구 : 준자치구(지방의회 미구성) · 광역시 자치구/군 : 행정구 (광역시장 임명, 지방의회 미구성)
도	· 자치단체로 존치, 단 2013년 6월말 대통령/국회에 보고를 위한 기본연구 진행 중
시/군	통합가능권역 수원·오산·화성 안양·군포·의왕 김포·강화·인천 서구(일부) 및 계양구(일부) 괴산·증평 삼척·동해·태백·울진·강릉(옥계) 속초·고성·양양·인제 철원·포천·연천 창원·함안 목포·무안·신안 군산·김제·부안·서천 진주·사천 통영·거제·고성 김해·강서(부산) 음성·진천 태안·서산 구미·칠곡 의정부·양주·동두천 남양주·구리 전주·완주
읍면동	· 주민자치회 설치 (3개 대안 최종 검토 중) : 통합형, 협력형, 독자형
특별지방행정기관	·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이양 계획 마련
교육자치/자치경찰	· 교육자치의 지방자치 통합노력안 마련 · 자치경찰제 확대 실시안 마련 · 교육자치와 자치경찰 관련 별도 법률 규정안 마련

한편 동 체제개편위원회가 향후에 해야 할 주요 활동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2년 6월 말까지 시군통합, 자치구 개편, 읍면동 주민자치, 자치경찰 및 교육자치와 특별지방행정기관 개편 등 핵심과제에 대한 기본계획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2013년 6월 말까지 도의 지위와 기능 재정립방안을 별도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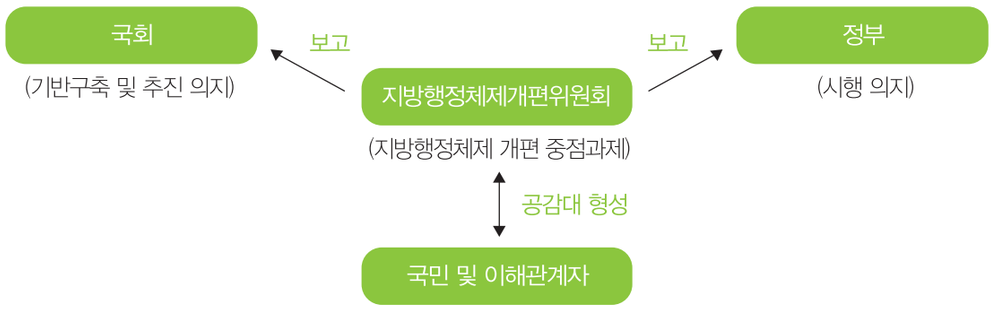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개편위원회 출범] : 2월16일 [특행 지방 이양계획 접수] : 9월	[체제개편 기본계획 보고] : 6월 (대통령, 국회) * 국회의원 선거 : 4월 11일 * 대통령 선거 : 12월 19일	[도 개편방안 보고] : 6월 (대통령, 국회)	[체제개편 추진 완료] : 6월 [개편위원회 폐지] : 12월 * 제6대 지방선거 : 6월 4일

둘째, 대통령과 국회에 기본계획을 보고한 이후, ①시군통합의 경우 행안부장관 주관 하에 지방의회 의견수렴 및 주민투표 실시('13.6)와 통합자치단체설치법 제정('14.3)을 행하고, ②특·광역시 자치구 개편의 경우 개편방안에 따른 입법추진('14.6)과 자치구(군) 개편대안에 행·재정 조치사항 검토('13.6)을 행하며, ③대도시특례의 경우 통합자치단체와 대도시특례 관련 법령개정('14.3)을 행하고, ④도 지위/기능재정립의 경우 연구완료('12.12)와 도 개편 시안을 마련('13.3)한 후 기본계획보고('13.6) 및 입법추진('14.6)을 행하며, ⑤주민자치회의 경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13.6)와 입법추진('14.6)을 행하고, ⑥지방분권 강화의 경우 특행사무이양 접수('11.9)와 특행기관 이양사무안 마련('12.12) 그리고 지방분권 추진방향마련('13.6)과 교육자치/자치경찰 관련 입법추진('14.6)을 행하게 될 것이다.

셋째, 핵심과제 중 개편종합기본계획 관련사항, 도의 지위와 기능재정립사항, 주민자치회 설치와 운영사항, 개편 관련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 실시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2.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성공적 추진과제

가. 성공적 추진방향



나. 2012년 대통령 선거에게의 추진 표명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공약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사안이 포함되느냐가 향후 성공적 추진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즉 각 정당 대선 후보자들이 국가운영계획상 중요한 공약과제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인지하여야 하고 실질적으로 공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많은 대선 후보자들이 대선공약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제시할 경우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다. 19대 국회의 개편 추진기반 구축

2012년 4월 19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17대와 18대 국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입법안을 제출했거나 특별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한 대다수 국회의원들이 국회 진출을 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지방행정체제 개편 전반을 주도할 국회 내의 진용이 무너진 상황에서 이를 재가동할 수 있는 내부적 기반이 19대 국회에서 어떠한 형태로 구성되는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19대 국회는 6월 30일까지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기본계획을 제출 · 보고 받게 되는데, 보고 이후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여야간 협의 혹은 특별위원회 구성 합의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적극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당별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개편안들이 많아지고, 정당 내 우선순위가 낮은 것으로 인식되면 탄력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국회 내 지방행정체제 개편 주도 집단의 출현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국회 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우선순위 높은 과제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자리 잡을 수 있어야 6월에 보고되는 개편안들에 대한 토론의 장이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라. 정부의 대응 및 지원 강화

2012년 6월에 대통령에게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기본계획이 보고될 것인 바, 이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사후적 대응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행정안전부는 체제개편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재원조달 등을 위해 전 정부적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고, 2012년 6월 이후 체제개편위원회의 향후 일정과 연동화 하여 단계적 추진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청주청원 통합은 과거 3차례에 걸쳐 실패를 경험하였지만 최근 개편위원회의 통합추진 사업에서 벗어나 개별적 접근을 통해 통합을 추진하고 있고 2012년 6월경에 주민투표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바 이를 통해 성공적 통합모형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전주/완주간 통합 합의에 따른 지방주도적 통합 추진에 대해서도 정부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마. 개편안 우선순위 설정 및 다양한 의견 수렴

2012년 6월 보고되는 기본계획, 2013년 6월에 보고되는 도의 지위와 기능재정립, 그리고 대선 이후 시행될 예정인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등에 대한 전략적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각 개편안들이 체제개편위원회에서 1단계로 의견수렴을 하였지만 실제로는 찬성과 반대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보다 광범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치고 이를 통해 가능성 있는 대안과 이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전략적 대응을 해야 한다. 특히 개편 대상지역에 대한 형평성 있는 인센티브 제공 및 특례화 등을 통해 정책적 특혜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입법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바. 국민(주민) 공감대 형성

학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는 학자, 지방4단체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설득 및 갈등 해소 등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 일반에 대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내용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고 국가 대형사업으로서의 당위성 등을 알리는 홍보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과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교감 등을 통해 설득 및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사. 체제개편위원회 위상강화

체제개편위원회는 2012년 6월에 국회와 대통령에게 기본계획을 보고하게 되면 1차적 임무를 완수하게 되지만, 보고 이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보완과 2013년에 보고되어야 할 과제에 대한 방향 설정 그리고 체제개편위원회 설치 시한까지 입법화 과정 이행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들이 남아 있다. 따라서 1단계 보고 이후 느슨해질 수 있는 조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지방행정체제개편의 초석, 창원시

박 완 수
창원시장

"통합 창원시 출범 준비부터 현재까지 창원시만의 차별화된 성공전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창원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 지역 간 균형발전 및 특색을 살린 발전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창원 스마트, 마산 르네상스, 진해 블루오션" 이라는 균형발전 3대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창원 스마트 프로젝트는 창원의 산업구조와 도시품격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것으로 첨단산업 및 R&D 중심의 창원공단 정밀진단, 창원과학연구복합파크 조성, 창원과학고 개교, 창원과학기술원 설립 추진 등을 통해 구체화 하고 있습니다.

마산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마산의 새로운 부흥을 주제로 하여 마산만 워터프런트 조성사업, 도시재생 테스트 베드 선정, 어시장 상권 활성화, 로봇랜드 민간투자자 우선협상, 대상사 선정 및 실시협약 체결, 구산해양관광단지 지정, 자유무역 지역 고도화 착공 등을 통해 구현되고 있습니다.

진해 블루오션 프로젝트는 세계적인 해양중심도시이자 동북아 항만물류 거점을 위한 것으로 해양레저관광 허브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명동해양관광단지 조성, 웅천읍성 및 웅천도요지 복원, 신항만 및 배후지역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하여 실현되고 있습니다.

"시군구 통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해당 자치단체들 간의 합의와 지역주민들간의 합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통합 창원시의 경우 이들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발생하였던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이후 지역 간 갈등에 관한 문의가 있으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남여가 만나서 결혼을 하여 한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도 각자가 살아온 생활방식과 취향 때문에 싸우기도 하는데 하물며, 창원, 마산, 진해라는 큰 3개의 시(市)가 통합을 하였는데 일시에 모든 것이 조화로울 수는 없으니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화합을 이루어 가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통합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은 잠재되어 있는 지역갈등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한 것인데, 바로 시민협의회와 지역발전추진위원회, 시책추진주민위원회였습니다. 시민협의회는 지역별 지도층을 위해 각 지역별로 구성하였으며, 시책추진주민위원회는 34개 분야 235명으로 구성하여 균형과 화합을 위한 시책 발굴과 해결이 어려운 난제에 대한 논의를 하는 합의 장을 꾸려나갔습니다. 다행히 시민들이 더 나은 미래라는 큰 틀에서 고민을 해주었고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진 결과 통합시가 안정적으로 연착륙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통합창원시 행정구 명칭 선정을 위한 시민공청회

"통합 창원시가 출범한지 2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출범 이후 발생되었던 또는 현재 발생된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전략은 무엇이었습니까?"

통합 창원시는 출범 2년 만에 통합의 효과를 가시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계 살기 좋은 도시대상(LivCom Awards) 은상 수상, 세계생태교통연맹 의장도시 선정, IAEC 세계총회 개최 및 2018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유치 등으로 국 · 내외적으로 창원시의 위상이 높아지고 시민의 자긍심도 커지는 효과를 가져 오고 있습니다.

통합이후 가장 큰 현안은 그동안 여러 채널로 잘 알려진 빅3 문제가 있습니다. 통합시 청사의 소재지 문제, 야구장과 통합 상징물 건립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결국 그 지역의 발전을 원하는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청사는 3대 지역의 화합과 미래 균형발전 가치가 존중되는 곳으로 해야 할 것이며, 야구장과 상징물은 관중동원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입지가 선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의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시민의 뜻이 가장 잘 반영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각 지역별로 진해 블루오션, 마산 르네상스, 스마트 창원이라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도시재생, 산업기반 강화, 해양레져관광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으며, 도시 간 연결도로 확충, 도시자치권 강화, 프로구단 제9구단 창단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토대도 마련하고 있으니 향후 창원이 세계 유수의 도시들과 겨루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명품도시로 발전해 나갈 것을 확신합니다.

“시군구 통합을 추진하는 단계와 통합이후 정착 단계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의 주된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통합을 하고 보니 인구, 규모 등은 광역시 수준이지만, 기초자치단체로서의 한계로 인한 여러 가지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치권한과 재원의 취약으로 지속적인 도시성장을 담보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정부는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에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통합을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의 타당성 및 장·단점에 대해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며, 또한 지역 정치권과의 소통으로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사전 합의점 도출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991년 지방자치의 부활 이후 중앙정부가 추진한 시군구 통합은 현재까지 총 세 번에 걸쳐 이루어져 왔으나 실제 통합사례는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주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991년 지방자치의 부활 이후, 1995년에 40개 시(市)와 38개 군(君)을 합쳐 39개 도농통합시, 1998년 4월 3여(여수시, 여천시, 여천군) 통합시, 2006년 7월 1계층과 2개 행정시를 설치 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있으며, 2010년 7월 1일 자치단체 자율통합 추진에 따라 통합 창원시(창원·마산·진해)가 출범 하였습니다. 도농통합 이후 지방의 역량강화, 국가경쟁력 제고,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하였으나, 아직까지 행정계층의 변화나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은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 청주시와 청원군은 1995년, 2005년, 2009년 3차례의 통합시도가 있었으나 주민, 지방의원 등의 반대로 통합이 무산되는 사례가 있듯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으로 지역주민의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추진한 것이 지방행정체제개편의 부진사유로 생각합니다.

통합창원시 출범식

“2012년 3월 현재, 22개 권역 58개의 시군구에서 행정구역 통합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군구 통합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언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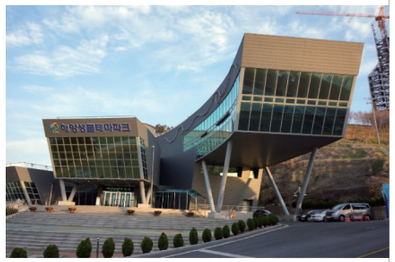
통합의 궁극적 목적은 비용절감을 통한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데 있으며, 현재 도시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인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화에 민감하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것은 결국 도태라는 결과만 남길 것입니다. 통합이 도시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변화과정이라는 사실에 시민들의 인식 증대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통합을 준비하는 지자체에서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승적 차원에서 기득권층의 양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자치단체장 및 지역 정치권의 통합의지와 소통이 전제된다면 무난히 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며, 통합 이후에도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의 단합된 힘과 꾸준한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대담·정리 : 전 성 훈(한국지방행정연구원 초빙연구원)

푸른 바다의 고장, 창원

해양 생태계와 해전사의 만남, 신나는 해양체험!
_창원해양공원

창원 해양공원은 진해 앞바다의 작은 섬, 음지도에 조성된 환상적인 바다공원이다.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보이는 아름다운 작은 포구의 풍경에 벌써 마음이 설레이는 곳으로 바다 풍경을 먼저 즐기면서 나들이 기분을 만끽할 수 있다. 해양공원은 해양생물테마파크, 해전사전시관, 군함전시관 등의 전시관시설과 바닷가 주변으로 만들어진 공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입구에 전복을 붙여 원뿔 모양으로 만든 커다란 조형물이 인상적인 해양생물테마파크에는 살아 있는 화석을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 극피동물과 연체동물 등 온갖 종류의 해양생물들의 모습과 생태를 모형으로 전시해 놓아 온 가족이 함께 바다 속 생태계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해전사체험관은 군함의 도시, 진해에 대하여 알게 해주는 곳으로 전시관의 규모는 해양생물테마파크 보다는 작지만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바다에서 벌어졌던 해전사를 알려주고 그때 사용된 배들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곳이다. 또한 지금 우리 영해를 지키는 해군의 전력체계와 실제 운용되는 무기들을 보여주어 더욱 실감나는 전시관이다. 가장 재미있고 볼거리가 많은 전시관인 군함전시관은 우리 해군에서 활약하다 2000년에 퇴역한 구축함인 강원함이 전시되어 있는데 함장대기실과 지휘본부에 해당하는 함교, 레이더실, 취사장, 침실 등 실제 군함의 곳곳을 제한 없이 둘러볼 수 있고 갑판으로 나가면 5인치 포, 미사일 발사대 등도 직접 볼 수 있어 특히 흥미진진한 체험을 할 수 있다. 전시관 밖 야외공원은 늦은 밤까지 문을 열고 일몰 후에 켜는 조명이 화려하고 아름다워 오후 늦게 방문해 전시관을 관람하고 야외공원에서 멋진 야경을 즐겨보는 것도 좋다.



해양생물테마파크

체험하며 즐기는 신비로운 과학의 세계에 가다.
_창원과학체험관

창원과학체육관은 경남 유일의 과학체험관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미래의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과학체험의 장이다. 하이테크적 이미지를 강조한 본관과 상설전시관인 2층은 사이언스테이션으로 기초과학존, 생명과학존, 기계소재존, 환경과 에너지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층은 사이언스 테마파크로 우주항공존, 정보통신존, 창원 특별존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시품의 90% 이상이 체험, 참여형으로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특색 있는 아이템들을 구비하고 있다. 특히 바람, 물방울, 진동 등을 직접 느껴볼 수 있는 특수영상관과 15m 돔 안 천장의 플라네타리움은 아름답게 수놓인 빛나는 별자리 영상을 감상할 수 있어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는 특별한 추억이 될 것이다.

소박한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만나는 곳
_봉암갯벌 (갈대아래 붉은발말똥게길)

봉암갯벌은 다른 갯벌에 비해 규모가 작고 이름이 크게 알려지지 않은 곳이지만 유명한 다른 갯벌 못지않게 흥미롭고 신비한 곳이다. 마산만중에서도 가장 초입부분인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수역에 펼쳐져 있는 곳으로 숨겨진 보물과도 같은 곳이다. 봉암갯벌에 도착하면 봉암갯벌을 상징하는 앙증맞은 꽃과 물고기, 게가 그려진 표지판이 반겨준다. 맑은 초여름 날 선선한 바람에 바다 특유의 내음과 민물의 내음이 함께 섞여 상쾌한 기분을 선사해 주는 곳이다. 광대하지는 않아도 넓은 갯벌이 펼쳐진 속에 많은 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고 갯벌 양쪽에 가득한 갈대들 사이로 나무다리를 가볍게 산책하듯이 걸으며 갯벌을 감상할 수 있다. 갯벌 왼쪽에는 생태학습관도 있는데 봉암갯벌에 살고 있는 동식물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어 아이들과 함께 방문한다면 더욱 알찬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다. 갯벌 가까이 가득한 갈대들이 바람에 살랑이는 모습과 갯벌이 어우러져 조화를 이룬 모습이 아름다운 봉암갯벌은 가족과 함께 맑은 날 방문해 자연의 소중함과 신비로움을 느껴볼수 있는 특별한 장소가 될 것이다.

정리 (주)소프트하우스 www.e-softhouse.com

기초 자치단체 통합의 이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 일본의 경험

오스기 사토루
(수도대학 도쿄 대학원 교수)

1. 헤세이 대합병과 종합행정주체로서의 기초자치단체

일본에서는 1999년부터 약 10년에 걸쳐 이른바 헤세이 대합병이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그 결과,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의 수가 3232개에서 1700여개로 약 4할이나 감소하였다. 말 그대로 일본의 지도가 크게 바뀐 것이다.

헤세이 대합병을 시정촌 대합병의 역사에서 살펴보면, 세 번째의 모멘팀이었다. 처음에는 일본이 근대 국가 형성기에 있었던 메이지 대합병으로, 종래의 자연적인 마을 공동체인 Gemeinschaft(マチ, ムラ)를 국가의 말단기구(시정촌)로 통합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메이지 합병으로 7만여개 이상이던 정촌이 1만 5천여개로 통폐합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민주화 분권화 개혁으로 자치단체는 행정 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되었다. 쇼와 대합병에서는 이처럼 확대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치단체의 행재정 시스템을 정비하고자 규모의 적정화가 시도되었고 그 결과, 1만여개 있었던 시정촌이 3분의 1로 축소되었다.

마지막은 헤세이 대합병으로 지방분권 개혁이 추진되는 가운데, 기초자치단체의 자주 · 자율성 강화가 그 목표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지방분권 일괄법에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시정촌) 또한 "주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기본으로, 지역의 행정을 자주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역할을 널리 담당"(제1조의 2)하는 존재로 정의되었다.

즉, 기초자치단체 통합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가의 문제는 통합을 통해 지역 행정의 자주성, 종합성을 어느 정도 향상시킬 수 있는가와 연계되어 있다. 총무성이 발표한 시정촌 합병에 관한 연구회 보고서 "헤세이 합병의 평가 · 검증 · 분석"(2008 년 6 월)에 따르면, 합병은 자치단체 경영에 대해 다음과 같은 영향이 미쳤다고 기술되고 있다.

- 전문성을 갖춘 직원의 배치가 증가하면서 주민 서비스의 고도화 · 전문화
- 조직 · 체제의 충실화에 따른 대 주민 서비스 향상
- 행정 경영기법(퍼블릭 코멘트 제도, 행정평가 제도 등)의 정비 · 확충
- 직원수 삭감 등 세출 삭감에 의한 재무행정 운영의 효율화
- 행정 및 재정 기반 강화를 통한 광역자치단체로부터의 권한 이양 촉진

2. "작은 세계 도시" 이이다市(飯田)의 도전 *_지방 중핵도시의 사례*

구체적인 통합 사례로 나가노현 이이다市를 살펴보자. 이이다市는 일본의 거의 중앙인 남쪽 신슈 지방의 미나미 알프스와 중앙 알프스에 둘러싸인 이나 계곡(伊那谷) 위치한 도시이며, 인구는 약 10만 5천명이다. 이이다市는 시가 된 이후(1937년), 몇 차례 통합을 경험했지만, 헤세이 대합병 시기에는 上村, 南信濃村 등의 지역을 편입, 통합하였다(2005년).

필자도 가끔 이이다市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으나, 도쿄에서 직선거리는 그렇게 멀다고 할 수 없지만, 교통편이 나쁘고 이동에 4시간 이상 걸리는 먼 지역이다. 앞으로 리니아 신칸센이 개통될 예정이며, 도쿄에서 접근시간도 대폭 단축될 것이다(40분 정도).

이이다市는 "환경 모델 도시"로 평가되고 있다. 태양광과 산림에서 에너지를 지산 지소(地産地消)의 그린 전력으로 활용하여 선진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것을 적극적으로 전국에 알리고 있다. 통합 이후, 시 승격 70 주년이 되는 2007년 4월에 "계속 살고 싶은 도시, 살아 보고 싶은 도시이이다, 사람도 자연도 빛나는 문화 · 경제 · 자립도시"를 목표로 한 도시 플랜인 제5차 기본구상 기본계획이 결정되었다. 관련된 주요 활동으로는 다음의 사업들이 제시되었다.

- 자치기본조례의 제정 : 현재 일본에서는 200여 곳 가까운 자치단체가 최고 규범으로 자치단체의 "형태"를 규정한 자치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있지만, 이이다市의 경우, 의회가 주도하여 이를 제정했다는 점에서 보기 드문 사례이다.
- 지역 자치조직의 도입 : 이이다市는 통합 이듬해에 시민에게 밀접한 행정업무를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처리하였고, 지역의 자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역 자치구를 도입하였다. 각 지역에서는 자치진흥센터를 거점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헤세이 대합병 이후, 광역화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청과 주민간의 물리적 · 심리적인 거리감을 없앨 수 있도록 지역 커뮤니티가 중시되고 있다. 이이다市는 특히 적극적으로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상황은 무토스 마을 만들기 사례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 남신슈(南信州) 정주자립권 구상 : 이이다市는 2009년 국가가 추진하는 정주자립 권 구상에 따라 중심 도시를 선언하고 주변 13정촌에 1대1 연계 · 협력 관계를 제안하였다. 또한 정주 자립권 구상은 상당한 인구 감소와 급속한 저출산 · 고령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지역을 형성하여, 지방에서 3대도시권으로의 인구 유출을 억제하는 동시에, 3대 도시권 주민들에게도 각자의 생활 무대와 생활 방식에 맞는 거주 선택지를 제공하고 지방으로의 인구 유입을 창출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시정촌의 주체적인 노력으로 "중심 도시"의 기능과 "주변 시정촌"의 농림수산업, 자연환경 · 역사 · 문화 등 지역의 매력을 활용하여 NPO와 기업 등 민간과의 상호 역할분담, 연계 · 협력을 통해 지역 주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고 권역 전체에서 필요한 생활 기능을 확보하며, 지방권의 인구 정착을 촉진하는 정책이다(총무성 홈페이지 참조). 일반적으로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대중 교통과 병원 등이 주요 과제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이다市가 주도하는 남신슈 정주자립권 구상도 의료 · 복지 · 산업진흥 · 환경 · 교육 문화 등 다양한 과제가 "남신슈 정주자립권 공생 비전 '에 제시되어 있다.

● 학륜(學輪) IIDA : 이이다市에는 4년제 대학이 없기 때문에 역발상을 통해 전국의 대학 · 연구자 · 학생과 적극적인 교류하고자 하였다. 즉 이이다를 기점으로 형성된 상호 교류포럼이 학륜 IIDA 이다(2011 년 설립). 필자도 학생들과 함께 시내에서 합숙을 한 적이 있는데, 시장 스스로가 시정 강의를 하는 등, 이이다 지역 공부에 힘을 쏟고 있었다.

인구 감소, 저출산/고령화, 어려운 재정 상황 등 일본 자치단체의 공통적인 과제를 가지고 있지만, 이이다市는 시장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지역 자원을 탁월하게 활용하여 마을 만들기를 진행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오이라세 마을의 마을 만들기 · 인재양성 _ *소규모 자치 단체의 사례*

소규모 자치단체를 살펴보자. 동북 지방 아오모리 현의 오이라세 마을도 이이다市처럼 통합을 계기로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으로 자치기본 조례를 제정하였다.

오이라세 마을은 두 곳이 통합하여 탄생하였으나, 통합 후에도 인구 규모 2만 5천의 소규모 자치단체이다. 그러나 통합을 계기로, 자치기본조례를 주민 주체로 개발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 형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또한 해산물과 농산물 등 지역 자원의 브랜드화를 모색하는 등 산업 진흥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이러한 소규모 자치단체에서는 인재가 중요한 관건이 된다. 오이라세 마을이 독특한 것은 지역의 전략 거점이 되는 행정기관의 인재육성에 대하여, 주민 참여위원회가 설치되어 검토를 시작했다는 점이다. 필자가 좌장으로 참여하는 "오이라세 마을 스스로 배움을 촉진하는 인재육성 시스템 연구회" "(2011년 ~)는 필자를 포함한 대학교수 2명, 공무원 6 명 (2명은 조합 추천), 마을 주민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의 자치단체는 일반적으로 인재육성은 인사 관리의 일환으로 간주되어, 관공서 내부에서 검토된다. 아마도 오이라세 마을은 일본에서 처음으로 이러한 관행을 깨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행정이 담당해 온 서비스가 아웃소싱과 주민과의 협동작업으로 수행되는 경우가 널리 확산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인재육성도 공무원이라는 닫힌 세계 내에서만 생각해서는 더 이상 안되는 시대가 되었다. 통합으로 행정 시스템 자체를 다시 구축하고 행재정 기반 정비에도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담한 활동이 시도된 사례로서 오이라세 마을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4. 마무리 _ *지방분권 시대의 통합 자치단체의 경영*

일본 사회는 "잃어버린 10년" 또는 "20년" 라고 일컬어지는 상황 속에서, 통합에 의한 "V자 회복" 을 즉시 바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그 현실이다.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한 뒤에, 자치단체 통합의 장점을 살린 행정의 경영을 어느 정도 제대로 할 수 있는가가 현재 요청된다. 통합 자체는 해결책도, 만병통치약도 아니다. 하지만 무한한 가능성을 도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뛰어난 활동에 매진하는 자치단체의 사례들을 통해 엿볼 수 있었다.

번역 : **하 동 현**(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도농통합 자치단체

- '94년 시군통합이 이루어졌던 도농통합시 31곳 중 26곳을 대상으로 1995년부터 2006년까지 평균세출 및 교부세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음.
  통합 이후의 항목별 세출 증가율은 통합 후 지방자치단체들의 예산이 어떤 분야에서 어느 정도 증가하였거나 감소하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음
  - 특히, 세출은 지역주민의 니즈가 반영된 행정수요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통합 이후 어느 분야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음

- '94년 시군통합 이후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1인당 총지출, 1인당 행정운영비, 1인당 사회보장비, 1인당 경제개발비, 1인당 교부세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1인당 사회보장비, 1인당 지방교부세, 1인당 경제개발비, 1인당 총지출, 1인당 일반행정비 등의 순으로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

도농통합 자치단체의 분야별 지출 및 교부세 증가율

(단위: %)

		1인당 총지출	1인당 일반행정비	1인당 사회보장비	1인당 경제개발비	1인당 교부세
경기	평택시	4.92	4.74	15.36	1.01	8.2
강원	강릉시	17.36	3.19	18.12	45.76	11.26
	삼척시	15.82	8.17	17.46	24.5	12.55
	원주시	5.81	4.96	14.26	4.84	10.27
	춘천시	4.62	6.07	14.41	1.31	9.74
충북	제천시	7.36	5.37	16.64	4.7	10.33
	충주시	7.13	1.94	14.07	6.66	10.49
충남	보령시	5.11	5.51	10.85	3.5	10.9
	천안시	4.67	3.2	17.06	2.4	2.17
경북	김천시	13.51	3.68	16.25	30.43	10.89
	문경시	7.44	6.71	15.64	2.19	12.43
	상주시	9.43	7.32	13.89	10.47	11.41
	안동시	6.35	3.11	15.04	4.82	11.42
	영주시	4.8	1.6	18.78	1.42	10.92
	경주시	5.18	1.84	15.85	3.57	12.66
	포항시	5.96	3.83	17.06	4.78	17.07
경남	김해시	6.51	1.87	13.86	4.18	7.04
	사천시	9.86	5.63	16.9	13.23	11.48
	진주시	6.5	6.86	17.73	7.27	12.14
	통영시	8.89	3.91	17.44	16.06	8.77
전북	군산시	4.75	2.05	15.45	6.05	9.85
	남원시	7.38	8.08	24.56	6.34	12.27
	익산시	7.27	5.88	16.68	3.57	11.2
	정읍시	8.09	7.17	17.96	6.98	11.54
전남	나주시	9.3	6.33	17.76	9.6	11.62
	순천시	7.09	3.68	14.6	0.89	10.71
전체	최소	4.62	1.6	10.85	0.89	7.04
	최대	17.36	8.17	24.56	45.76	12.66
	평균	7.74	4.72	16.3	8.71	10.74

*자료: 지방재정연감(1996-2007)

박 해 육(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제5차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일본정책대학원대학 공동연구회 개최

주　제 / 한 · 일 지방자치단체의 특례제도
일　시 / 2012. 5. 10(목) 14:00
장　소 / 제주 그랜드호텔 세미나실
주　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일본정책대학원대학

2012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가천대학교 공동세미나 개최

주　제 / 한국의 지방자치와 지역발전
일　시 / 2012. 5. 16(수) 14:00~18:00
장　소 / 가천대학교 국제어학원 국제홀(1층)
주　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가천대학교

2012년 제2차 임시이사회 개최

일　시 / 2012. 5. 17(목) 10:30
장　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2년 1차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공동연구회 개최

주　제 / 한 · 일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및 과제
일　시 / 2012. 5. 31(목) 15:00
장　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　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서울사무소

제3차 KRILA 자치포럼개최

주　제 / 2011년도 고객만족도조사 결과에 대한 자문 및 환류방안 토론
일시 및 장소 / 2012. 6. 5(화) 11:20 ~ 12:20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세미나실
초청인사 /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한국정책과학학회 회장)

정기간행물 발간

- **KRILA FOCUS (5월호)**
  – 지역행복을 위한 낙후지역 정책의 모색
- **지방행정연구지**
  – 통권89호(2012년 6월호) : 6월 30일 발간

KRILA 교육연수

담당자 : 이혜선 02 · 3488 · 7353

- **제3기 주민자치센터 교육**
  교육장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강의실
  교육일시 / 2012. 5. 30 ~ 6. 1
  해당기관 / 전국 지방자치단체

- **제3기 기후변화와 녹색공동체 교육**
  교육장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강의실
  교육일시 / 2012. 6. 13 ~ 6. 15
  해당기관 / 전국 지방자치단체

- **제3기 지역공공디자인 교육**
  교육장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강의실
  교육일시 / 2012. 6. 20 ~ 6. 22
  해당기관 / 전국 지방자치단체

알림마당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Newsletter **알림마당**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간되는 책자 및 소식지를 **무료로 홍보해 드립니다.**
홍보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T 02·3488·7361 / yjtak@krila.re.kr 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